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 관계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중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자원 운용을 통해 국력우위를 지키며 군사·경제·이념적 수단을 고루 활용하여 친미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한편 중국은 독자적 강대국 지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주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늘리면서 친중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중국이 계속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한 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면, 영향력 행사에서 군사력이 접하는 비중을 늘리고 연합 구축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에 맞서 국력우위를 지키고 친미연합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듯 변모된 양국의 안보전략이 맞물리며 미중 리더십 경쟁이 본격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아시아에는 두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리더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된 세력권을 구축함에 따라 극심한 패권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미중 리더십 경쟁 속에서 완충국인 한국은 양자택일 압력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이때 한국에게 차악의 방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남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과도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동맹의 내실화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한미동맹의 내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목 차

1. 도입
2.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 가. 목표
 - 나. 첫째 방법: 우세한 국력 유지
 - 다. 둘째 방법: 연합 강화 및 확대
3. 중국의 안보전략
 - 가. 목표
 - 나. 첫째 방법: 영향력 제고
 - 다. 둘째 방법: 연합 구축
 - 라. 점진적 팽창
4. 미중 관계: 리더십 경쟁
 - 가. 경쟁촉진 요인
 - 나. 경쟁제한 요인
5. 정책적 함의

1. 도입

- 미중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변화 추세와 관련해 열띤 논쟁이 학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음. 이 글에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두 강대국의 안보전략과 상호 관계의 진화 방향을 진단하고 한국 외교정책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려 함.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들이 존재하므로 미중 관계에 관해서도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 글에서는 특정 기성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 이론의 구성요소를 취사선택하고 필자의 아이디어와 조합해 차별화된 분석을 시도함. 미중 상호작용의 주 무대가 아시아임을 고려하여 논의를 그에 한정할 것임

2.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가. 목표

- 미국 정부는 역외리더십정책(offshore leadership)이라 규정할 수 있는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음.¹⁾ 안보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전략의 주 목표임. 유일한 리더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정책을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 폐기한 이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여타 강대국들의 국제적 리더십을 수용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리더십 행사를 가급적 삼가며 주요 지역에서 세력 균형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역외균형정책(offshore balancing)²⁾이나, 국제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사양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미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군사력 및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동맹을 강화·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나. 첫째 방법: 우세한 국력 유지

- 미국은 우세한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한 국력자원 운용을 기도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력 사용을 전반적으로 자제하는 ‘절제된 국방’ 기조를 유지³⁾
 - 특히 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육군력의 투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해군력과 공군력에 주로 의지하고자 함. 해공군력도 실제로 투입하기보다는 무력행사 위협을 통한 강압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함. 그리고 미국은 군사작전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동맹국들에게 전가

하고자 함. 특히 지상전에서는 동맹국에 주도적 역할을 맡기고자 함

- 오바마 정부는 ‘적극적 외교’ 기조도 유지하고 있음⁴⁾
 - 이란 핵문제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이란 핵 개발에 관한 잠정합의가 최근의 일례임
 - 통상관계와 국제제도를 비롯한 비군사적 정책수단을 리더십 유지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함.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추진하고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합(UN)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리도 중시함
 - 이에 입각해 강대국관계의 관리에 최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이러한 우선순위 재조정의 주요 원인임
 - 테러집단과 불량국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음. 근래에 미국 국민들이 9.11 공격과 같은 대형 테러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대체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이라크 침공이 불필요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북한 문제에 관해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도 오바마 정부가 불량국가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강대국관계를 우선시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위치한 아시아를 중시하고 있음.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는 장기적으로 보면 필연적임.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이슬람국가(IS)의 득세, 이란 비핵화 프로세스의 공전,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 등에 따라 실제 회귀가 지연될 수 있음
- 미국이 이렇듯 스마트한 국력자원 운용을 중시하는 것은 상대적 국력의 약화와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가용재원의 제약 때문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며 군사력의 한계를 자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함⁵⁾

다. 둘째 방법: 연합 강화 및 확대

- 미국은 해양 및 연안 국가들을 규합하여 자국이 주도하는 연합을 구축함⁶⁾
 - 역외국가인 미국에게는 해양지역이 가장 중요하며 연안지역이 그 다음순위에 해당함
 -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등을 이미 세력권에 편입하였음. 이들은 해양국이거나 중국/러시아와 육상국경을 공유하지 않은 연안국임⁷⁾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군사력 및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동맹을 강화·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 첫째, ‘절제된 국방 기조, ‘적극적 외교’ 기조, ‘선택과 집중.’ 미국이 이렇듯 스마트한 국력자원 운용을 중시하는 것은 상대적 국력의 약화와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가용재원의 제약때문임

둘째, 미국은 자국의 리더십을 수용한 주요 동맹국들에게는 역량강화와 책임분담을 촉구함.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당장 아시아의 유일 리더가 되거나 최고 리더가 되려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세력권을 설정하고 역내 국제정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내비침.

- 이에 더해 중국/러시아와 접한 연안국들도 끌어들이기 위해 작업 중임. 베트남,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연합의 강화·확대를 위해 우세한 해공군력과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확장역지 등 안보지원을 통해 우방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⁸⁾(하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한정하며, 특히 지상군의 활용은 최소화함)

- 아울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추진하여 경제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노력도 기울임
- 민주주의 등 공유가치를 강조하며 민주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미국은 자국의 리더십을 수용한 주요 동맹국들에게는 역량강화와 책임분담을 촉구함. 일본, 한국, 호주가 이에 해당. 또한 주요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의 핵심을 구축하고자 함

3. 중국의 안보전략

가. 목표

○ 국력신장에 따라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은 독자적 강대국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노력

-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나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던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더 나아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⁹⁾ 당장 아시아의 유일 리더가 되거나 최고 리더가 되려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세력권을 설정하고 역내 국제정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내비침. 이는 “결부당두(決不當頭)”라는 덩샤오핑의 당부를 절반쯤 탈피한 노선. 이른바 “주변국 외교”가 리더십 추구의 서막이라 볼 수 있음¹⁰⁾

나. 첫째 방법: 영향력 제고

○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영향력을 키우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우선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하려 함.¹¹⁾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에 이르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중동을 아우른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 이를 염두에 두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설하고 멤버십을 확대하고자 하며, 브릭스(BRICS) 개발은행 등도 운용하려 함. 통화스와프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외국 정부·기업이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고, 자국 기관이 국외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업그레이드하여 교역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짐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 영향력을 늘리는 선순환을 추구함
- 중국은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주변국과 인적교류를 적극 확대하는 작업이 이 노력의 일환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장학금 확충 등이 이에 포함됨. 이는 친중파를 양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공공외교를 통한 매력공세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음
 - 군사적 차원에서는 전력투사능력 증진에 매진함
 - 중국군의 현대화와 군비증강을 통해 전력투사능력을 기르면서 배타적 군사 활동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아가려 함
 - 자국군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타국군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 시도. 중국이 2010년에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계획에 반발해 군사 보복을 위협한 일과, 2013년에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남중국해에 신형군함을 추가 배치하며 미국 함정을 위협한 사건 모두 세력권 구축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¹²⁾
 - 이와 함께 주변국과 안보협력을 병행 추진하여 영향력 증진을 꾀함

첫째, 신장된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영향력을 키우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둘째,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은 친중연합의 구축도 추진

다. 둘째 방법: 연합 구축

-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은 친중연합의 구축도 추진
 -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어려운 내륙국을 포섭하는 데에 역점을 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라오스, 몽고

근래의 자신감**넘치는 행보에도****불구하고 중국이****미국에 정면도전할****가능성은 당분간****낮음. 군사력 격차가****현저하기 때문임**

- 등이 실제/잠재적 포섭대상임
- 인접 연안국을 포섭하는 것이 중국의 또 다른 주요목표임.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북한이 이에 해당
- 미국과 동맹을 맺은 연안국과 해양국에게는 쐐기전략(wedge strategy)을 구사하여 일단 친미연합에서 떼어내려 함. 한국도 그 대상국에 포함
-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과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음.¹³⁾ 이에 경제력을 주로 활용함. 군사력과 달리 미국에 비해 열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덜 위협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중국이 러시아와 인도를 일대일로 등 다자경협에 포함하려는 것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보임

라. 점진적 팽창

- 근래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정면도전할 가능성은 당분간 낮음. 군사력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임¹⁴⁾
 - 현재 내륙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크지 않으므로 중국은 해양세력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섬. 그런데 해양세력권 확대경쟁의 승패를 가를 해공군력에서 중국은 미국에 크게 못 미침. 해공군력은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우세한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을 이 부문에서 따라잡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 해공군력은 또한 자본집약적이기도 함. 그런데 연안국인 중국은 해양국인 미국과 달리 육군력 확충에 국방비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야 하므로, 해공군력에 미국만큼 재원(자본)을 투입할 수 없음
 - 중국에게는 군사력을 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미국도 유사시 전력의 대부분을 아시아에 별 무리 없이 이동 배치할 수 있음.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이 일단락되었으며, 이란과 시리아 등 불량국가와 IS 같은 테러집단을 상대하는 데에는 전력을 대거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또 다른 주요지역인 유럽에도 대규모 군사개입을 야기할만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인접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군사개입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
 -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국과 동맹을 맺고 있음. 중국이 연안 및 해양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할수록 연안·해양국들이 불안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것임. 반면에 중국은 변변한 해공군력을 갖춘 동맹국을 두고 있지 못함
- 국력이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하는 이유임¹⁵⁾
 - 중국은 아직 “도광양晦(韜光養晦)”와 “화평굴기(和平崛起)” 등의 구호

로 표현되는 타협전략을 완전히 폐기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음. 인내하고 기다리면 훗날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겨룰 수 있는 반면에, 선불리 도전하면 강력한 견제를 받아 국력증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임.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며 미국과의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것도 상대적 국력의 신장추세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¹⁶⁾ 시진핑이 “중국몽(中國夢)”의 실현과정을 2049년까지로 길게 상정한 것도 장기적 국력변화 추이에 관한 낙관적 전망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¹⁷⁾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팽창은 점진적이고 간헐적으로 추진될 것임.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한동안 숨을 고르며 반발을 무마하는 것임. 최근 남중국해 공동개발을 비롯한 해양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행보에 해당됨

4. 미중 관계: 리더십 경쟁

- 향후 십여 년간 중국이 계속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한 일류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 미국과 중국의 안보전략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임¹⁸⁾
 - 앞서 설명한 미국 안보전략의 속성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절제된 국방, 적극적 외교, 선택과 집중, 연합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클 것이기 때문임
 - 중국 안보전략에는 보다 현저한 질적 변화가 생길 것. 영향력 행사에서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연합 구축노력이 강화되며, 대외팽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이렇듯 변모된 양국의 전략이 맞물리며 리더십 경쟁이 심화될 것. 리더십 경쟁은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리더의 지위를 놓고 벌이는 경합

가. 경쟁촉진 요인

- 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우세한 육군력을 활용하여 인접한 내륙지역 일부에 배타적 세력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이에 속할 개연성이 큼. 중국과 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 완충국들에게도 우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러시아와 인도 등 여타 강대국 때문에 배타적 세력권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몽고, 카자흐스탄, 네팔, 부탄이 이에 해당. 연

중국은 우세한 육군력을 활용하여 인접한 내륙지역 일부에 배타적 세력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이에 속할 개연성이 큼

미국은 해양지역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할 것.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 여기에 속할 공산이 큼. 이로써 아시아에는 두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리더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임. 두 세력권의 경계에 존재하는 회색지대가 안보딜레마를 촉발할 것

안국이지만 타 강대국의 강력한 군사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도 유사한 처지에 놓일 것(유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류강대국인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중국에 필적할 수 없을 것)

- 미국은 해양지역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할 것.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 여기에 속할 공산이 큼. 중국과 접경하지 않은 연안국도 포섭할 수 있을 것.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이 이에 해당됨
- 이로써 아시아에는 두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리더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임. 상호협력을 근간으로 한 콘도미니엄을 구축할 가능성은 적음
- 두 세력권의 경계에 존재하는 회색지대가 안보딜레마를 촉발할 것이기 때문임
 - 연안지역은 연안국인 중국과 해양국인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함(연안국인 중국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해양과 내륙 사이에 위치한 연안지역에는 미국의 강점인 해공군력과 중국의 주력인 육군력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이 연안지역에서 경합을 벌일 개연성이 큼. 베트남과 미얀마 등 중국에 인접한 연안국이 경합의 장이 될 것. 연해도서인 대만과 (북한 때문에) 연해도서나 다름없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처지에 놓일 것임
 - 미중 양국은 이들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충돌할 수 있음
- 해상에는 경계선을 분명히 획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중국해 등 중국 연해에 회색지대가 형성되어 미중 양측의 해군이 충돌할 수도 있음
- 세력권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들이 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줄타기외교를 펼치는 것도 회색지대의 형성을 초래하는 정치적 요인이 될 수 있음. 미중 어느 한 편에 완전히 예측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탐욕이 줄타기외교를 조장할 수 있음
- 중국이 주요 수출입품이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미국과의 안보딜레마가 악화될 위험성도 있음
 - 현재 중국은 세계제일의 수출국인 동시에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각지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광석, 구리, 니켈 등 천연자원과 다양한 산업부품을 사들이는 세계 2위의 수입국임.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인 해외무역은 약 90퍼센트 가량을 해상수송에 의

존하고 있음¹⁹⁾

- 이러한 현실 때문에 중국은 해상교통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미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인 석유가 통과하는 인도양과 말라카해협에 해군력을 투사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더 넓은 작전반경을 가진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²⁰⁾
-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민경제의 동맥인 주요 교통로를 직접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방치하거나 미국과 같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타국에 의탁할 수는 없기 때문임
- 중국의 교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점차 강화될 것임. 미국을 능가하는 해군력을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해군력 투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음. 따라서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미국은 해군력 증강으로 맞설 것이며, 그 결과 군비경쟁이 촉진될 것임

나. 경쟁제한 요인

-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된 세력권을 구축함에 따라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임.²¹⁾ 일부 연안지역도 미국의 세력권에 포함되겠지만 그 핵심거점은 해양지역임. 냉전기 닉슨독트린이 드러내었듯, 해양국인 미국은 판세가 불리할 경우 아시아 연안지역에 철수할 의향을 갖고 있음. 반면에 중국의 핵심거점은 연안 및 내륙지역임. 근래 연해지역을 장악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하리라 예단하기 어려움²²⁾
-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심한 군비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임
 -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대륙국가인 중국에게는 사활적 이익이 아님. 특히 중국과 같은 광활한 자원부국은 해상봉쇄에 취약하지 않음. 중국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취약성은 더욱 감소할 것. 55퍼센트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도 에너지 소비의 18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뿐임.²³⁾ 석유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더라도, 중국은 전략비축량과 소비효율성을 높여 해상봉쇄에 대한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임²⁴⁾
 - 중국은 육상교통로 건설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음. 시진핑 정부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함.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중국은 이미 카스피 해 지역의 유전과 자국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음. 중국에 우호적인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이 육상교역로 구축의 주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된
세력권을 구축함에
따라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을것임**

**군비경쟁에서 미국을
이기기 어려운
전략적 현실도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노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것임**

요 후보지임.²⁵⁾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과 철도망도 이미 완성된 상태임

- 중동·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 자신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 아님. 또한 형세가 불리해져 부득이할 경우, 아시아 연해를 통과하는 현 수송로를 포기하고 원양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대체 활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중국의 제한적 해군력증강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군비경쟁에서 미국을 이기기 어려운 전략적 현실도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노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것임

- 중국이 일류강대국 반열에 오르면 이류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관계에 균열이 생길 소지가 커짐. 내륙강대국인 러시아는 미중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세력으로 남을 것이며, 중앙아시아 등 인접 내륙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 이때에는 중국이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더라도 러시아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임. 러시아는 자신보다 현저히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인접국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느낄 것이기 때문. 우월해진 중국이 육군력을 대폭 강화하며 내륙지역에서 배타적 세력권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러시아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임
- 지난 십여 년간 러시아가 중국과 제휴했던 것은 월등한 국력을 지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팽창과 중앙아시아 침투 등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했기 때문. 십여 년 후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약해진 미국이 대등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이처럼 압박할 가능성은 별로 없음. 오히려 미국은 1970년대에 주적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했던 것처럼, 일류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류강대국인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개연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중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육군력을 강화해야 함. 따라서 해공군력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임
- 강대국과 접경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국방비를 해공군력 육성에 집중할 수 있음. 미국은 여러 지역에 군사력을 분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 대한 개입을 줄여 아시아에서 입지를 보강할 수 있음. 중국과 달리 미국은 일본과 같은 주요 해양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이 해공군력 경쟁에서 미국을 누를 확률은 매우 희박함

○ 미중 패권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상기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해공군력을 갖출 수 없음

- 경제·기술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핵우위(nuclear superiority)를 점할 수도 없을 것임
- 미국을 해양·연안지역에서 몰아내고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큼(오산, 오인, 국내정치 등의 비구조적 요인 때문에 패권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5. 정책적 함의

- 미중 관계가 필자의 예상대로 변모하면 한국은 양 진영 중 택일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할 것
 - 한국의 적지 않은 국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중립국으로 놓아두려 하지 않을 것.(연해도서나 다름없는 한국은 연안국인 중국과 해양국인 일본·미국의 완충지대적 성격을 지님)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과 한국을 상대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두 일류강대국의 경쟁적 개입을 초래할 개연성이 큼
 -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끌기위해 회유할 경우 한국이 줄타기외교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위험이 더 큼. 전자의 이득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독자노선을 택할 수 있는 강대국(최소한 이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해야 함. 하지만 한국이 십여 년 안에 강대국으로 도약하기에 충분한 경제력 및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확충할 가능성은 희박. 따라서 장차 한국은 두 일류강대국의 압박에 시달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미중의 압박은 이러한 딜레마의 작은 전조임
- 양자택일 압력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게 차악의 방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남는 것
 - 한국과 같은 연안국의 안전에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강력한 육군력과 해군력을 겸비한 근접 연안강대국 또는 우월한 육군력을 보유한 인접 내륙강대국이기 때문. 중국이 전자에 해당. 가장 위협적인 국가와 합세하는 편승정책은 대체로 위험함²⁶⁾
 - 역외국가인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주권·영토를 침탈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됨. 해양국인 미국은 연안국인 한국에 유사시 해공군력을 위주로 한 효과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또 미일동맹의 맹주로서 해양국인 일본을 제지해 줄 수 있음(만일 일본이 미일동맹을 벗어나 독자노선을 걷더라도, 자체 육군력 부족 때문에 한국을 다시 강점하기 어려울 것)

양자택일 압력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게 차악의 방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남는 것

**한국은 한미동맹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과도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 양자택일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과도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이 같은 한미동맹의 내실화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함. 만약 국내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외형성장을 급하고 요란하게 추진하면 중국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위험을 초래할 것. 또한 동맹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과도한 기대가 거품을 형성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 동맹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한미동맹의 내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의 우려를 가능한 불식할 필요도 있음. 이를 위해 순수 방어동맹의 성격을 확립하고 중국에 대한 공격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한중 사회·경제·안보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중국에 적당히 허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음.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중관계 강화를 추진하려면 미국정부와의 사전교감이 필수적임

주석

- 1) 이동선, “미중 군사관계의 미래,” 『전략연구』 제18권 제1호 (2011), pp. 163, 175.
- 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2014), chapter 10.
- 3) 이동선,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 절제된 방위와 적극적 외교,”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2호(2009), pp. 130-136.
- 4) 이동선(2009), pp. 136-139.
- 5) Stephen G. Brooks,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3(2012), pp. 33.
- 6) 이동선(2011), p. 179.
- 7) 해양국·연안국·내륙국의 분류는 개별국가의 ① 해안선과 육상국경선의 비율과 ② 정치·경제중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함. 대륙국은 연안국과 내륙국을 아우르는 개념임. 해양국은 다시 연해국과 원양국으로 세분할 수 있음. 이 이 국가유형 분류체계는 저자가 창안하였음.
- 8) Brooks, et. al.(2012), pp. 11-12, 40-50.
- 9) 이동선 (2011), p. 176.
- 10) 이선진,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JPI 정책포럼』 No. 2014-19/26(서귀포시: 제주평화연구원, 2014), p. 22.
- 11) 홍제성, “중국 ‘일대일로’ 세부계획 공개...사업 본격 추진,” 연합뉴스, 2015년 3월 28일.
- 12) 박일근, “중국, 남중국해 외국선박 규제,” 『한국일보』, 2014년 1월 10일.
- 13) 최우선 “동북아,” 『국제정세전망 2014』(서울: 국립외교원, 2013), p. 54-56.
- 14) 이동선(2011), pp. 172-174.

- 15) 이동선(2011), p. 178.
- 16) 최우선(2013), p. 40.
- 17)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2013); “시진핑 중국몽의 핵심은 모두 배불리 먹는 것.” 『주간조선』, 2013년 12월 16일; 외교부 정책기획국 정보분석과, “중국몽의 내용과 시사점.” 2010년 4월 6일.
- 18) 중국의 부상이 순조롭게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음. 경제성장세의 둔화와 자산시장의 버블 등 심각한 문제가 이미 나타남.
- 19) <http://www.chinairm.com/print/3780621.html>
- 20) 중국은 석유 수입량의 약 85퍼센트를 인도양과 말라카해협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음. Charles L. Glaser, “How Oil Influences U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2(2013), p. 132.
- 21)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1999), pp. 81-118.
- 22) 연해지역 장악을 위한 중국의 시도와 그로 인한 미중 대립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Robert S. Ross, “The Revival of Geopolitics in East Asia: Why and How?” *Global Asia*, vol. 9, no. 3(2014), pp. 8-14; Walter Russell Mead, “History Isn’t Dead Yet: Asia and the Return of Geopolitics,” *Global Asia*, vol. 9, no. 3 (2014), pp. 20-23.
- 2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February 4, 2014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briefs/China/china.pdf>);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4.
- 24) 중국은 이미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Glaser(2013), p. 133.
- 25) 미얀마와 중국을 잇는 파이프라인이 2013년에 완공되었음. 이선진(2014), p. 20.
- 26)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저자 약력

■ 이동선

現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소재 East-West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함.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안보와 국제관계이론임. 저서로는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 (Routledge, 2008)가 있으며, 최근 학술논문으로는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안정성: 안정 및 불안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전략연구, 2015), “동맹국 제지의 이론과 실제: 북중 동맹 사례” (국제관계연구, 2014), “Blame Game under Fire: Parsing South Korean Debate on North Korea Policy” (Korea Observer, 2013), “Causes of North Korean Belligere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12), “Ties That Bind?: Assessing the Impac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on East Asian Alliances” (Pacific Focus, 2011)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